“기업 피해 최소화” 수출규제대책단 가동

이용섭 광주시장 긴급회의
종합상황반 운영 등 대응체제
中企 육성·세제 지원 담아
김영록 전남도지사 SNS에 글
“도민과 일본 경제침략 극복”

1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출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자금지원과 지방세 징수 유예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가동키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1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 민관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벌써 주문 보류, 거래처 변경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기기 등 수입 의존 관련 소재부품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량의 재고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해 시청 각 실·국은 물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으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시 일자리경제실에 설치했다.

또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즉시 가동키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12일 경제고용진흥원 원스톱지원센터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960-2671)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지원 유관기관들은 “기관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해 피해 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진정한 극일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고, ‘화이트(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우기지만 그야말로 자가당착, 억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대법원판결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면서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2차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전 세계 피해자 166만명에게 5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해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노 재팬(NO JAPAN)’ 운동은 아베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 표현”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거둬야 하며 우리도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민과 함께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日 백색국가 배제’ 대응 시나리오 분주

오늘 임시 국무회의, 중장기 대책 주목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단기적·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시 국무회의 대신 대국민담화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 다른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부 계획을 담은 ‘추경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애초 이 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임시 국무회의 일정으로 인해 유동적인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영향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품목 관련 분야에 대해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수출상품 및 수출지역 다변화, 신산업 육성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되돌리기엔 너무 먼 한·일

강경화 장관-고노 다로 日 외무상 45분 회담 입장차 확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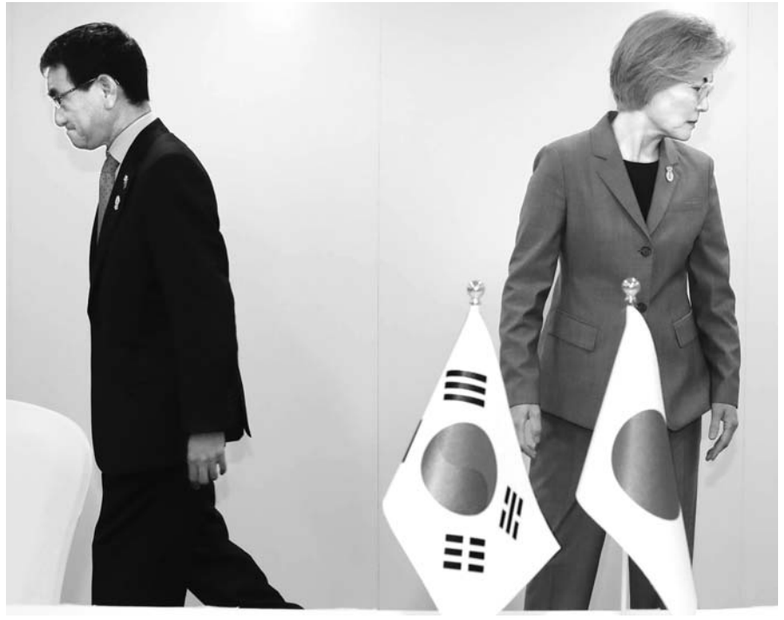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 각의 결정은 2일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한일 간 간극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데 대해서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2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순이 있다”라며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자민당, 방일 의원단 ‘문전박대’

니카이 간사장 면담 일방 취소…방일단 외교적 협의 촉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당파적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은 1일 일본 측 의원단과 만나 현재의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관계가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일단은 이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에 앞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 논의를 위한 국회 대표단 방일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의회외교포럼·한일의원연맹 등 국회방일단 10명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국회의원 10명은 7월 31일 도쿄에서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방일단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을 철회·유예할 것을 요청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이 훼손되고 향후 한일 간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푸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측은 즉각 양국 간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수출관리 체제의 적정한 조치이며,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공통인식을 향해 한일 양국이 열린 자세로 의견교환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방일단은 밝혔다.

방일단은 또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제안했던 ‘1+1안’을 포함해 열린 자세로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측은 전날 오후로 잡혔던 면담 일정을 1일 오전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6시간 만에 내부 회의를 이유로 들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세라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 채용시까지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010-4061-7200